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 61

IIIRI Online Series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김익수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겸 아세아문제연구원장

2020. 2. 21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경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김 익 수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겸 아세아문제연구원장

우한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CV)’ 사태가 전 세계를 공포로 휩쓸어 놓고 있다. 정점을 지났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하지만 혹시 4월경에라도 CV 사태가 진정된다면, 중국 경제는 과연 6%대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No)’이다.

그 이유는 첫째, CV 사태 전후의 상황이 16년 전의 사스 때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사스 때에는 중국 경제가 10%대의 고성장 가도를 달릴 때였지만, 지금은 경기 둔화 국면, 그것도 무역 전쟁,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어려움을 막 견뎌낸 시점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시기도 나빠 인구이동이 많은 춘절 연휴 기간 성수기에 발생했다. 당연히 가장 큰 1차적 피해는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했고, 제조업 부문도 공급망 혼란과 주문 위축으로 2차 피해를 입게 되었다.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중국은 올해 1/4분기에는 4%대, 연간으로는 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중국 정책당국은, △ 금리·지불준비율의 인하, △ 역(逆)레포(Repo)를 통한 유동성 공급, △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 정책은 소비·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유통·물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더욱이 지금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의 총부채/GDP 비율(2019년)이

304%나 되기 때문이다. 설령 그런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경기 하강세를 되돌리기는커녕 지방정부·기업의 부채, 은행 대출의 부실화만 증가시킬 뿐 지속적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소규모 경기부양 정책만 실시되더라도, 5.4%인 중국 은행권의 부실대출 비율이 2020년 말이면 8.1%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초여름이 되어도 CV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광둥 등의 연해 대도시에서 바이러스 공격이 재개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세계적 전염(pandemic)’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중국은 그야말로 글로벌 리스크를 확대재생산하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경착륙 과정에서의 주요 희생자는 현금 동원 능력이 떨어지는 민간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소매 유통·IT 분야의 민간 대기업들마저 신규 고용을 줄이거나 인력을 구조 조정할 경우, 청년 실업 문제는 당 중앙의 지도부를 괴롭히는 엄청난 사회·정치적 리스크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돌발변수는 중국이 미국과의 1단계 합의를 지키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이다. 1단계 합의문에서 중국측은 2년간에 걸쳐 2천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농·공산품, 에너지 등을 수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측은 CV 사태를 이유로 수입 규모의 축소, 이행 시기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나, 미국측이 이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의회의 ‘중국 때리기’에 관한 초당적 합의를 배경 삼아, 보조금 지급과 기술탈취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사안이 중국 경제관리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중국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CV 확산 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는 시(習) 주석이 2단계 협상마저 타결 짓지 못한다면, 2022년 10월의 제20차 당대표 대회에서 주석직 연임 전선에 먹구름이 깔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중국이란 호수에는 이미 ‘블랙스완(black swan)’이 출현해 있다. 그러면 경제 경착륙 가능성과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에 수출의 26%, 해외직접투자의 32%를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 시장에 대한 시각, 접근방식과 전략 모두를 ‘방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화학 등의 대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의 다중적 리스크 상황에서 시장만 믿고 중국에 대규모 장기투자를 하는 것은 곧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유사하다. 앞으로 중국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에는 자산·지분의 양도, 임직원 철수 등에 관한 ‘출구 전략’을 반드시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다가올 리스크에 대한 대비 없이 시장기회에만 집착할 경우, 중국 사업은 물론 국내 본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미 진출한 사업의 경우에도, 수익성, 성장성을 재평가해 자본 및 고용조정을 하거나 동·서남아 등 비(非)중국권 지역으로 생산기지,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중국 잔류의 편익과 잔류 비용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과 같은 대안 시장에 들어가 유사한 강도의 투자노력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기회편익·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의 경우, 중국 내 매출액이 16% 감소하고 2년 연속 적자가 나자 작년부터 1/4 정도가 본국과 타지역으로 공급망과 생산기지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지금은 저돌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를 관리하면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성공하는 시기이다.

/끝/

저자 소개

김익수 교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원(University of Oxford)에서 ‘중국 경제 내 과도투자 원인 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위원으로 대중 경제교류, 동북아 경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1995년 3월에 고려대 경영학과로 옮겨 국제경영 분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학술지에 중국 시장 진입, 경쟁전략, 지적권 보호, 反부패 컴플라이언스 전략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는 아세아문제연구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의 부패 관성과 反부패 정책 대응: 동학, 성과 및 한계』, 『중국 내 지적 재산권: 침해실태, 원인, 배경 및 대응전략』, 『중국투자론: 이론과 실제』, 『중국시장 마케팅: 전략과 사례』 등이 있다. (Email: iksu@korea.ac.kr)